



보도시점

2025. 3. 18.(화)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 시

배포

2025. 3. 17.(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생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확대한다

-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8일(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교육 추진계획 수립(10~)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러·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의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환기가 필요하였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15) 8.5% → ('21) 17.0 / 비만 유병률 : ('15) 34.1% → ('22) 37.2

이에 농식품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 대상, 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식생활 교육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 ①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 ② 체험 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
- ③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④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

첫째,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과 밀접히 연계한 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학년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연중 운영한다. 아울러, 초·중 학교에 학교자율시간** 및 자유학기***를 통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학기당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각 학교만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과목(활동) 운영
- ***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운영

1인 가구 증가·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사회 교육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 중·장년, 고령자, 다문화가정, 임산부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제는 개발한 콘텐츠를 지역 거점 교육기관에서의 집합 교육, 찾아가는 교육, 원격·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격 확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둘째, 연속적인 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력을 높인다.

식생활 교육의 방식을 기존의 일회성 체험에서, 식품의 순환 체계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다회차 교육으로 전환한다. 농업·농촌 체험, 영양 교육, 조리 실습, 환경 교육 등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급변하는 식생활 여건에 대응하는 능력의 함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체험공간)을 생산 체험부터 조리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한다. 시설 표준 관리 매뉴얼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에 근거,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정(354개소)

셋째, 지역의 실정·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지역 특산물 수확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교육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식생활교육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내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강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교육 수요와의 원활한 양방향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민간조직, 강사 및 체험공간 관리자,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넷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전문인력 등 교육 기반을 내실화한다.

농식품부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온라인 플랫폼(「식생활 교실」, www.foodlife-edu.or.kr)의 기능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정보의 통합 제공, 더 나아가 식생활교육 관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이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한다. 이수를 위해서는 8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에도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①식생활교육의 이해, ②지속가능한 식생활, ③농업·농촌의 가치, ④음식과 식문화, ⑤미각 교육, ⑥식품의 선택과 조리, ⑦바른 식습관 형성, ⑧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교육 관계자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학교·민간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식생활교육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의 구체적 관리 사항 미비

→ (개정) 체험공간 등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갱신)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배달·외식 소비 증가, 영양 불균형 심화, 환경 부담 증가 등 식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할 시점”이라면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사회 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요약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4-201-2272)



I. 추진 배경

-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국민 영양·건강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09 제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 제1차 : '10년 ~ '14년, 제2차 : '15년 ~ '19년, 제3차 : '20년 ~ '24년
- 식생활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식생활 교육은 중요**
 -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 및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 영유아·학생 등 미래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푸드 시스템* 전 과정에서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관심 제고
 -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수반되는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 순환 체계
-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식생활 개념 확장(건강 →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기반한 교육 등 추진**
 - * 건강·영양 개선 목적 외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관점에서의 식생활
-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
 - *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실천율(%) : ('20) 64.1 → ('24) 57.5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 ('20) 35.0 → ('24) 34.8

➔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의 내실화 및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II.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미래세대 등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 및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한 식생활 교육 기반 확충
 - (맞춤형 교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육* 제공
 - * 학생 대상 교육('20~'24) : 621,222명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연계 교육('20~'24) : 21,505명
 - (농업·환경) 텃밭·생산현장 체험, 환경교육 등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농업·환경을 고려하는 식생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 음식 소비 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 : ('20) 86.9 → ('24) 92.5
 - (인프라) 지역 농산물 공급-소비 체계* 활용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 교육 기반 확충
 - * 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식문화 공간을 포함한 복합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20~)
- **(한계)**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국민 건강·영양 및 식생활 개선 등 성과 미흡
 -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및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 성인병 발병 확대 등 영양 불균형*** 심화
 - * 가정 내 외식비 지출 : ('15) 280.4천원 → ('23) 495.6
 - ** 아침식사 결식률 : ('15) 24.9% → ('21) 28.0 → ('22) 29.8
 - ***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 ('15) 8.5% → ('21) 17.0 / 비만 유병률 : ('15) 34.1% → ('22) 37.2
 - 러·우·중동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
 - * 엥겔지수 : ('19) 13.5% → ('24) 14.3
 -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대상) 식품안정성 : 66.9%(중위소득 50% 초과 97.8)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교육 운영 차질 발생 등 현재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는 실효성 부족
 -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 추세*지만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국민 인식 환기 필요
 - * 일일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 ('19) 13,139톤 → ('22) 12,486

Ⅲ.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 [대상] 학교에서 사회까지 **초 주기 식생활 교육** 추진

- **(학교)** '방과 후 시간'을 통한 단발성 교육 → '늘봄학교',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 등 교육 제도와 연계를 강화한 **학교 식생활 교육** 추진
- **(사회)** 콘텐츠 개발 대비 실제 교육 실적 미흡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 건강·영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영양 지원 및 식생활 교육 강화

□ [내용] 단편적 구성에서 **체험 등 연계**를 통해 교육 후 식생활 실천력 제고

- **(구성)** 농업·농촌 체험, 영양·환경교육 등 분절적으로 제공 →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 걸친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히, 일상생활 속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 및 친환경 가치 실천을 위해 조리 과정 및 환경교육과 식생활 교육 간 연계 강화
- **(방식)** 대부분 일회성 체험활동 실시 → 체험 위주 **다회차 교육** 추진

□ [방식] 지역 단위 및 온라인 활용 등 **교육 방식 다각화**

- **(지역 단위 교육)** 중앙정부에서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지역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수요 발굴
 - 지역별 교육 공간·인력 등 자원 DB화 및 교육 수요와 원활한 매칭 지원
- **(교육 기반)** 교육 자료 게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저조 → 민·관에 산재된 정보 통합 제공 및 관계자 간 양방향 소통 강화 등 기능 고도화

가치	환경 · 건강 · 배려	
비전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	
목표	<p>◆ 학교교육 지원 강화 및 사회교육 기회 확대</p> <p>*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율(%) : ('24) 성인 47.8, 청소년 32.1 → ('29) 성인 65, 청소년 60</p> <p>◆ 지역의 푸드시스템과 연계되는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p> <p>* 지역 농산물 소비 실천율(%) : ('24) 56.4 → ('29) 70</p>	
추진 과제	<p>①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p> <p>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학교 식생활교육 확대</p> <p>②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사회 식생활교육 활성화</p> <p>③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연계 식생활 교육 제공</p>	
	<p>② 체험 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p> <p>① 영양·조리 교육과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p> <p>②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 가치 교육 강화</p> <p>③ 전통 식생활의 일상 속 확산을 위한 교육 제공</p>	
	<p>③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p> <p>①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소비 기반 강화 교육</p> <p>② 지역형 교육 수요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p> <p>③ 지역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p>	
	<p>④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p> <p>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p> <p>②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p> <p>③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p>	
	추진 체계	다양한 주체 간 협업 확대, 법적 근거 보완, 성과 평가 고도화

IV. 세부 추진 과제

1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

- **(학교 교육)**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험 위주의 식생활교육 확대
 - (영·유아) 텃밭 및 농산물 오감 체험(농식품부), 수산물 체험교실(해수부), 튼튼먹거리 탐험대(식약처)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
 - 학년별 늘봄학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25~, 교육부 협업), 초·중학교 자율시간·자유학기 시간에 영양교육, 조리실습 등 체험형 교육 운영 지원

* 늘봄학교 식생활교육 운영 : (‘25) 50개 학급 → (‘26~) 연간 150개 학급 이상
- **(사회 교육)**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확대
 - * 대상 : 청년(1인가구), 임산부, 다문화가정, 중장년층, 고령자 등
 - 유관기관을 통한 지역 거점 집합 교육, 찾아가는 단체교육(군장병·직장인), 원격·사이버 교육, 가정 방문 교육(고령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건전한 식습관 유도를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 전국 확대(‘25~)
 - * 대상 : 8.7만 가구(‘25, 773억 원) → 장기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127만) 전체로 확대 추진

2 체험 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

- **(농업·농촌)** 농업·농촌의 자원 활용 체험형 식생활 교육 공간 확대 및 체험부터 영양·조리 교육까지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확충*
 - *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 (‘24) 354개소 → (‘29p) 400개소
 - 생애주기별 및 체험·영양·조리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구성 표준 지침 배포 및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환경)** 농식품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확대
 - 친환경적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캠페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운영
 - 언론·SNS를 통해 친환경 농식품 소비, 음식물 폐기물 절감 등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식품업계·소비자 대상 우수사례 발굴·확산

3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 **(지역 먹거리)**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 지역 특산물 생산지 탐방 및 수확 체험 등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추진
 - 지역 내 공공급식 수요처(어린이집·학교·공공기관·복지시설 등)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과 연계한 영양·조리교육 제공
- **(추진체계 구축)** 지역 식생활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수요 및 콘텐츠 발굴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
 - *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민간조직, 강사 및 체험공간 관리자,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 (학교 교육)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사회 교육) 지역 내 보건·복지·건강·교육 분야의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공간 연계
- **(지역 기반 정비)** 지역 단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제도를 마련하고, 지역별 교육 기반 현황을 DB화하여 교육 수요와의 연계 원활화
 - 지역먹거리 계획에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 추진 내용 포함
 - 권역별로 식생활교육 강사 및 식생활 교육 공간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수요와의 양방향 매칭 지원

4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

- **(온라인)** 디지털 교육 기반 고도화를 위해 단순 정보 게재 수준에 그쳤던 교육 플랫폼(식생활 교실)을 통합 정보·소통 기능 제공 등 강화
 - 유관기관에 산재된 식생활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 식생활·소비 동향, 지역 농산물 영양정보·조리법,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공간 정보 등
 - 정책 담당자-전문인력-학생 간 양방향 교류를 위한 소통 기능 탑재
 - * 지역별 교육 수요-기반 연계, 온라인 학습 및 연수, 학술교류, 교육 현장 의견 수렴 등
- **(전문인력 양성)** 강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이수제도' 신규 도입·운영('25~)
 - * 전문인력 이수제도 수료 인원 : ('25) 150명 → ('29p) 800명
 - **(교육과정)** 8개 분야 핵심 역량*에 대한 필수교육(총 120시간) 및 역량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수료자 대상 2년 주기 수강 권고) 운영
 - * ①식생활교육의 이해, ②지속가능한 식생활, ③농업·농촌의 가치, ④음식과 식문화, ⑤미각 교육, ⑥식품의 선택과 조리, ⑦바른 식습관 형성, ⑧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식생활교육기관*(24. 68개소)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V. 추진체계 정비

- 다양한 주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 등 교육 기관, 민간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식생활교육 협의회*」 구성
 - * 주요 논의 내용 : 관계부처 간 및 민-관 협력 교육사업, 현장 교육 수요 발굴, 교육 성과 평가 및 정책 자문, 국내외 우수 사례 공유, 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킹
-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 * (현행)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의 구체적 관리 사항 미비 → (개정) 체험공간 등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갱신) 법적 근거 마련